

육아정책연구소 KICCE 1차 정책토론회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2022. 9. 6. (화) 13:00~16:00

서울중앙우체국 21층 스카이홀 국제회의실

▶ 온라인 유튜브 송출 (육아정책연구소TV, 강득구TV)



공동주최 | 육아정책연구소,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위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위원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 ◎ 일 정 : 2022. 9. 6 (화), 13:00~16:00
- ◎ 장 소 : 서울중앙우체국 21층 스카이홀 국제회의실
온라인 유튜브 송출(육아정책연구소TV, 강득구TV)
- ◎ 공동주최 : 육아정책연구소,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위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위원

시간	세부일정
12:40~13:00	 등록 및 준비
13:00~13:20	 개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례 • 개회사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축 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위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위원 장상윤 교육부 차관
13:20~16:00	 자유토론 좌 장 박창현(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1 문미옥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 토론 2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 • 토론 3 정정희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 토론 4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 토론 5 이종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 토론 6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 토론 7 이재필 한국영유아교사협회 대표 • 토론 8 이해연 장애영유아연대 사무총장 • 토론 9 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영유아포럼 부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복지부 보육정책과 <p>* 질의응답 : 온/오프 정중</p>
16:00~16:05	폐회

육아정책연구소 KICCE 1차 정책토론회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2022. 9. 6.(화) 13:00~16:00

서울중앙우체국 21층 스카이홀 국제회의실

▶ 온라인 유튜브 송출 (육아정책연구소TV, 강득구TV)

공동주최 | 육아정책연구소,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위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위원



프로그램

시간	세부 일정
12:40~13:00	등록 및 준비
13:00~13:20	[개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례▪ 개 회 사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축 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위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위원 장상윤 교육부 차관
	자유토론
13:20~16:00	좌장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 토론 1 문미옥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토론 2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 토론 3 정정희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토론 4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토론 5 이종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토론 6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토론 7 이재필 (한국영유아교사협회 대표) 토론 8 이해연 (장애영유아연대 사무총장) 토론 9 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영유아포럼 부대표)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복지부 보육정책과 * 질의응답 온/오프 청중
16:00~16:05	폐회

CONTENTS

개회사 —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축사

-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이태규 |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
-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위원
- 강민정 |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위원
-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자유토론

1. 문미옥 |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3
2. 정효정 |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 13
3. 정정희 |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16
4. 이경미 |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21
5. 이종규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23
6. 위성순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25
7. 이재필 | 한국영유아교사협회 대표 27
8. 이해연 | 장애영유아연대 사무총장 30
9. 최현주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영유아포럼 부대표 32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 KICCE 1차 정책토론회,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육아정책연구소가 함께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육아정책연구소는 유보통합 및 유보 체제개편을 주제로 여러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를 이슈화하고 정책을 선도한 바 있습니다.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정부차원에서 유보통합추진단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유보통합추진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범부처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 존경하는 성일중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님,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 의원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의원님,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의원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 유보통합 추진에 애써 주시는 장상윤 차관님을 비롯하여 교육부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우리 육아정책연구소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과제인 유보통합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 토론회를 준비해주시고 좌장을 맡아주신 박창현 미래교육연구팀장님, 토론을 맡아주신 문미옥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님,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님, 정정희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님,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님, 이종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님,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님, 이재필 한국영유아교사협회 대표님, 이해연 장애영유아연대 사무총장님, 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포럼 부대표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 참여해주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더 나은 정책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6일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일종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육아정책연구소 KICCE 1차 정책토론회,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마련해 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님, 이태규 의원님, 강득구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그리고 토론회 발제,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육부는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질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며, 영유아단계(0-5세)에서부터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로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유보통합 방안을 제시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여 유보통합의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정부차원에서 유보통합추진단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고, 교육이 주도하고 보육과 돌봄, 지역사회가 함께 가는 큰 그림 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유보통합추진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범부처가 함께 갈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자리에 존경하는 이태규 의원님, 강득구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이 함께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회를 준비해주시고 좌장을 맡아주신 박창현 미래교육연구팀장님, 토론을 맡아주신 문미옥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님,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님, 정정희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님,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님, 이종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님,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님, 이재필 한국영유아교사협회 대표님, 이해연 장애영유아연대 사무총장님, 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포럼 부대표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생애에서 영유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과 보육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 참석해주신 온/오프 참석자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께서도 유보통합 실행과정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6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 KICCE 1차 정책토론회,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동 주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의적절하게 귀한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의장님, 강득구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문미옥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일에는 시작과 출발이 중요합니다. 첫 시작이 어렵지 시작을 잘 하면 어려운 과제라도 무난히 해낼 수 있습니다. 유보통합은 동일한 영유아에게 격차 없는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자는 것으로 유아의 권리와 행복을 위한 바람직한 국가 보육 정책입니다. 그러나 유보통합은 그동안 그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유아교육과 보육이 수요자인 영유아는 같은데 소관 부처도 다르고 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 시설설비기준이 달라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보통합추진단 구성부터 소관 부처 간의 견해 차이로 유보통합이 힘있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는 향후 유보통합 정책의 순항 여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부서로서 사회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권한과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교육이 주도하고 보육과 돌봄, 지역사회가 함께 가는 큰 그림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오직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양보하고 절충하며 유보통합의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유보통합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이 지지부진했던 원인을 살펴보고 극복방안을 찾아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대타협과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영유아부터 국가가 어떻게 책임 있게 돌보며 가르칠지는 저출생 시대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 부처는 과감하고 설득력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모든 교육 주체들은 대승적 결단과 협업 정신으로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의 첫 시작인 유보통합추진단 구성과 운영의 합리적 방안이 제시되고 정부 정책추진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 발제와 토론에 나서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9월 6일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 이태규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민정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 이태규 의원님 등 여야 의원이 함께 중요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또한 유보통합을 위해 꾸준히 실천적 연구를 해오신 육아정책연구소의 박상희 소장과 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사무, 예산, 법령을 하나의 부처로 이관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을 소관할 부처 통합은 유보통합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의미 있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정부기조와 기치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보통합에서 공정과 상식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 부처 통합의 방향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유보통합에서 중요한 일이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질적인 향상이고, 이를 위한 청사진과 로드맵이 잘 그려져야 합니다. 무상교육, 의무교육, 국가책임에 대한 구분은 물론 교육과정 구축과 교원 자격에 대한 담대하면서도 세밀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영유아의 바람직한 성장과 영유아 최우선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에 기울어겠습니다.

이 토론회를 준비해주시고 좌장을 맡아주신 박창현 미래교육연구팀장님, 토론을 맡아주신 문미옥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님,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님, 정정희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님,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님, 이종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님,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님, 이재필 한국영유아교사협회 대표님, 이해연 장애영유아연대 사무총장님, 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포럼 부대표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고 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위원 강득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놓고 각 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 여러분과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기관과 설립 유형에 따른 지원의 격차로 인해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오랫동안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시키려는 소위 말하는 유보통합을 둘러싼 논의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그간 논의만 무성하고 결과를 내놓지 못했던 한계를 이번에는 극복하길 바랍니다.

교육부는 현재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또 오늘 이 자리 마냥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담길 수 있는 추진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논란을 통해 배웠듯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제대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이후에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부모에게 부담인 유아 교육비, 한 해 200여 개의 유치원이 폐원하는 학령인구 절벽의 현실, 유보통합에 발맞춘 초중등 교육의 변화 등을 면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저 역시 오늘 나눠 주신 말씀들 잘 귀담아 듣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가 제대로 유보통합 추진에 나서고 있는지 살피고 또 살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위원 강민정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장상윤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유보통합'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성일종 정책위의장님, 강득구 의원님, 강민정 의원님, 이태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육아정책연구소와 '유보통합'에 대한 고견을 들려주실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새 정부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영·유아 단계(0~5세)에서부터 국가교육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 돌봄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의 '유보통합'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보통합'은 과거 정부에서도 중요 사안으로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3-5세 누리과정 도입과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 일원화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유보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이해 관계의 조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만큼, 이번 '유보통합'의 추진 체계는 현장의 공감대에 기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효율적인 '유보통합추진단'의 추진 체계에 대하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출발선 상의 공정한 교육·돌봄 기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보통합'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요구 또한 점차 커지는 상황입니다.

교육부 역시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고 국가교육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이어나갈 것이며 향후 구성·운영될 범정부 ‘유보통합추진단’의 핵심 주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하여, 교육부는 앞으로 각계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현장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우리 아이가 중심이 된 ‘유보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께서도 ‘유보통합’ 실현과 영유아를 위한 교육 정책 실행 과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9월 6일
교육부 차관 장상윤

자유토론

- 토론 1 | 문미옥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 토론 2 |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
- 토론 3 | 정정희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 토론 4 |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 토론 5 | 이종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 토론 6 |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 토론 7 | 이재필 한국영유아교사협회 대표
- 토론 8 | 이해연 장애영유아연대 사무총장
- 토론 9 | 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영유아포럼 부대표

3주체 유보통합추진단을 교육부에 즉시 구성해야

문미옥 |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

들어가며

수십 년간 역대 정부들이 유보통합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아직도 실현되지 못한 상태이다. 다행히 현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분명히 명시하며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동안 육아정책연구소와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등이 유보통합토론회를 개최해 오던 중 오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토론회라고 생각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기대가 된다. 특히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성일종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국민의 힘 교육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강득구 위원과 강민정 위원이 공동주최하며 여야를 불문하고 영유아들을 위한 정책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며 감사드린다. 또한 장상윤 교육부차관 축사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및 보육정책 과장의 참여에도 감사드리며, 이번에는말로 유보통합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범정부차원의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발제자 토론의 결론부터 제시하면, ‘**유아교육 3주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지금 즉시**’ ‘**교육부**’에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토론에서는 첫째, 역대 정부별로 이루어진 정부 및 학계의 주요 유보통합 추진내용의 특징을 정리하고, 현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단 구성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유보통합의 취지와 목적을 위한 추진단 구성의 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셋째,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원칙을 토대 추진단 구성 조직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유보통합 추진 역사와 유보통합 추진단 구성을 위한 시사점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1990년대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까지 역대 정권과 학계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왔다. 어떤 정권은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기도 했고, 어떤 정

권은 가시적 결실은 크지 않더라도 그 준비과정과 밑거름 작업을 매우 충실하게 하기도 하였다. 현 정권의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역대 정부와 학계 활동의 특징적인 사항을 정리하였다.

김영삼 정부 : 만 3-5세 유아학교로의 통합안 논의 시작

김영삼 정부는 1995년 5월 31일, 이른바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였고 유아학교로 만3-5세를 통합하는 안을 추진하려 함으로써 유보통합 논의를 하였다. 이는 역사적으로 유아교육·보육 통합 논의를 최초로 시작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 만 3-5세 유아학교를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이 제안되었고 유아교육계와 교육부는 유아학교 중심의 체제 개편에 찬성했다. 보육계는 만 3-5세 유아학교 체제는 만 0-5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에서 '만 3-5세 유아를 떼어내고, 만 0-2세 영아만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였고 유아교육법제정은 물론 유보통합 논의도 결국 무산되었다. 만 0-5세 중 일부만을 통합하려 한 정책계획이 유아교육·보육자 간의 갈등만 일으키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 : 만 3-5세 통합 기반 유아학교체제 통합안 유지

김대중 정부에서도 만 3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체제를 유아학교체제로 통합하려는 정책 방향은 이어졌다. 집권 5년 차인 2002년 10월 제 12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10개 정부부처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유아교육·보육 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정책연구를 추진하였다. 유보통합안으로 '단일부처 통합 일원화체제', '두 부처 간 연령별 이원화체제', '두 부처 간 상호협력체제'의 세 가지 안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2002년 12월 19일에 제 16대 대통령선거가 이어졌고, 집권 말기의 정책 추진동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유보통합은 별 진전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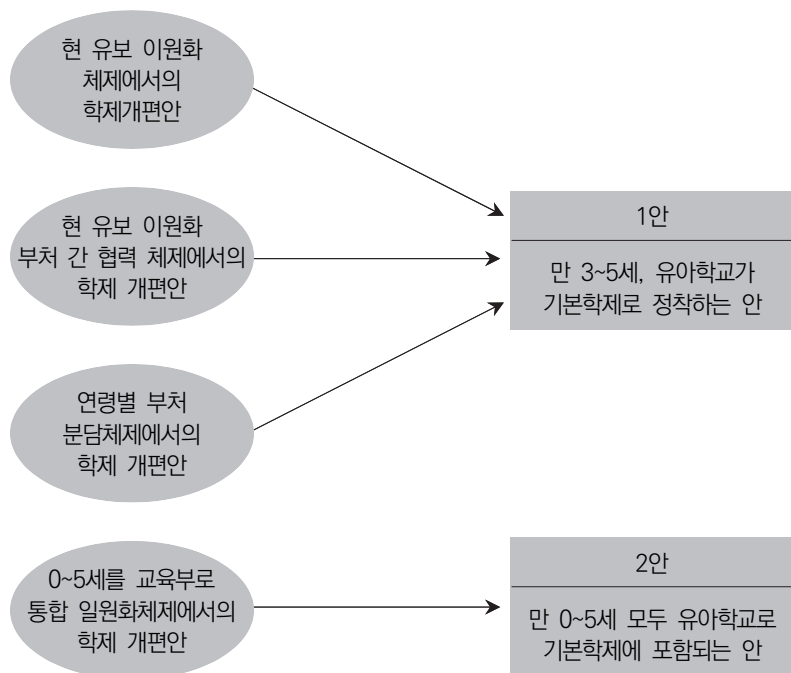
노무현 정부 : 육아정책개발센터 설립과 유보통합연구지원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4년 1월에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체제가 더 굳어졌다. 또한 교육혁신위원회를 주축으로 초등입학연령의 만 5세 하향화 및 K학년제 등을 토대로 한 유아교육 학제개편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두 정책안 모두 유아발달에 적합지 않음을 유아교육·보육계 모두가 강력하게 주장하여 취소되었다. 한편,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센터(현 육아정책연구소)를 2005년에 설립하고 유보통합연구를 지원하여 유보통합의 기초를 다지게 하였다.

학계에서는 한국유아교육학회가 유아교육·보육의 대표성을 가진 학자인 이상금, 문미옥, 이원영, 이기숙, 임택택, 이옥, 조부경, 백선희, 이병래, 이순영, 이미정, 김종해, 이미화, 임승렬, 윤기영 등 역대 유아교육·보육 관련 학회장급 교수들,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장, 당시 어린이집 주

구분	유보 통합 체제	장 점	단점/보완할 점
기능 통합안	현 이원체제를 유지하며 부처 간 협력하는 기능 강화를 통한 통합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과 보육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점진적으로 통합을 창출해 갈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 기능분담의 실현 가능성 미 지수
연령별 부처일원화안	연령별 부처 일원화 체제 0~2세: 여성부 3~5세: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대부분 국가의 제도임 • 행정부서의 관리 용이 • 영아보육 유아교육의 전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분 연령의 합의 도출이 어려움
0~5세 교육부 일원화안	0~5세 모두 교육부로의 통합 일원화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과 교육 모두가 제공되어야 하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한 안 • OECD선진국의 발전 방향과 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자격 제도, 시설 설비 규정의 보완 필요 • 교육부의 유아교육부서 확충 필요

*문미옥(2006, 한국미래를 위한 유아관련 학제 개편방향. P. 24)



[그림 2]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선안에 기초한 바람직한 유아학제 개편안 (문미옥, 2006. p.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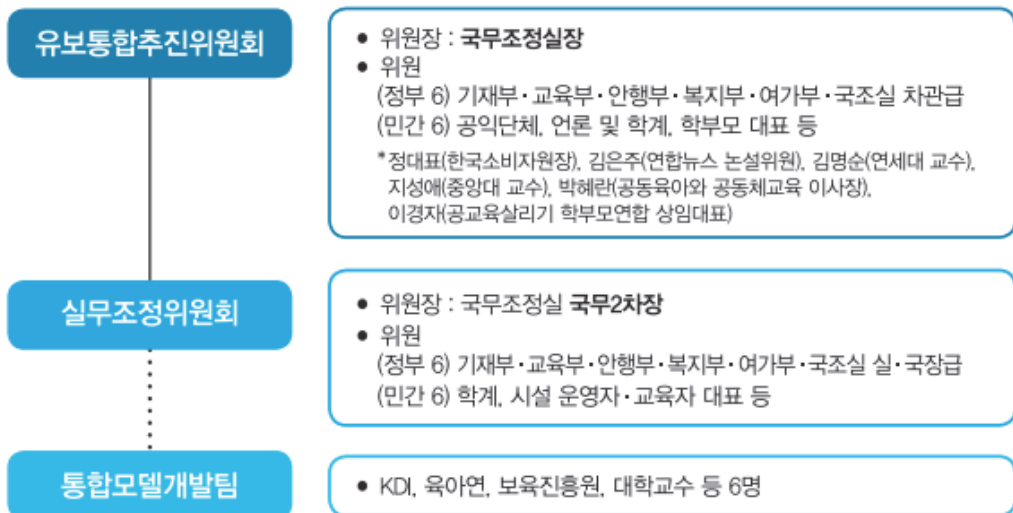
이명박 정부 : 누리과정으로 교육과정통합, 누리과정 지원금 지원

이명박 정부는 보육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였고, 국가수준 유치원교육 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을 누리과정으로 통합하였다. 유보통합의 중요한 부분인 교육과정 통합은 유보통합역사에 큰 획을 그은 성과였고, 누리과정의 명칭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정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이끌어 낸 점도 높이 평가할 부분이다. 유보통합의 주요한 부분인 교육과정 통합을 성공한 비결은 유치원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라는 결단이라고 본다. 누리과정 이후, 만 3~5세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위한 재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고 2016년에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재정을 부담하였다. 물론 교육부 소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적 근거 논쟁이 있었으나 정부의 결단과 의지, 그리고 재정지원이 있을 때 유보통합이 실현된다는 교훈을 남긴 것이다.

박근혜 정부 :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설치, 통합모델 개발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고 발표하고 2013년 5월 22일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하여 통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추진단 조직 구성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통합모델개발팀 등으로 [그림 3]과 같이 조직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유보통합을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하고자 기구를 조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분석하여 이번 정부에서 조직하고자 하는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13.5.22.),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 추진 밝혀.

[그림 3] 유보통합 논의 기구도

그해 12월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학부모 요구 충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유보통합을 임기 내에 완성하되 2014년부터 3단계에 걸쳐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단계별 통합방안에 따르면, 2014년 1단계에서 통합 전에 즉시 할 수 있는 것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보공시 내용의 확대·연계·통합, 공통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마련,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와 공통적용 항목을 개발하기로 했다. 2015년 2단계에서는 규제 환경정비 등 본격적인 통합 추진을 위해 결제카드 통일, 시설기준 정비·통합, 이용시간, 교육

과정 등을 통합하고, 교사자격과 양성체계 정비 및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2016년 3단계는 관리부처와 재원 등 통합을 마무리하는 단계로써 어린이집-유치원교사 처우 격차 해소 단 계적 지원, 관리부처 및 재원, 법률 통합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만 3~5세 유아중심 통합을 추진하려다 보육계의 반대로 실패한 것과 달리, 대상을 확대하여 만 0-5세 영유아로 확대하여 교육보육관계자의 갈등을 해결하고 유아 의 연속적 발달단계에 충실을 기하고자 했다는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계별 유보통합 은 계획하였던 1~2단계의 과제 중 정보공시 연계, 공통평가항목과 기준마련, 결제카드 일원화 등 일부과제를 실행(장명립,2022) 하는 것에 그치고, 결과적으로 유보통합정책은 용두사미로 끝나버 리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유보통합에 실패한 이유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부처통합을 우선적으 로 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 부처 통합은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권 말기인 마지막 3단계 로 한 것이 실패요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큰 골격부터 먼저 통합하여 통합 논의의 주체부처를 정해놓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구심점이 된다는 것을 시사 받을 일이다. 둘째, 재정확보 방안 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또한 정부부처 통합을 미룬 것과 일맥상통하는 정부의 의지 부족 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셋째,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많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전해지지만 실제 그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대외비로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구 및 조사결과를 대외비로 한 것이 이해 관련 집단들의 첩예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합의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유보통합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 으며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본다. 이번 정부의 유보통합추진단 구성과 활동과정은 투명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되고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 유보통합 대신 '유보 격차 해소'로 전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끝장토론까지 개최하 였으나(2017.6.11.)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하였다.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자문 위원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을 결정하고 실천함으로써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쟁 을 종결지었다. 또한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은 하였으나 유보통합 자체는 다시 언급되지 않았고, 어 떠한 진전도 없이 답보 상태로 머무르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 : 국정과제에 명시적으로 유보통합 포함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삼았다는 표현을 한 글들도 있지만, 2013년 5월 28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140

개 국정과제 (600개 세부과제) 전문 어디에도 유보통합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다만 국정과제 64번으로 만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가 선정되어 있고, 주요 추진 계획 설명에는 만 0-5세 보육 국가 완전 책임제와 누리과정 지원확대, 사립유치원교사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추진 등이 기술되어 있다.

명실공히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명시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기대한다. 유아교육과 보육계는, 2022년 8월 22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가 유아교육보육학회 및 교사연합회단체와 부모 단체 총31개 단체, 여야 12인의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국정과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2022). 특히 여야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뿐 아니라 평상시에 아이들의 행복과 교육권 돌봄권에 관심을 가진 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공동주최한 것은 유보통합이 결실될 좋은 여건이 충분히 준비된 것이라고 본다. 부디 이번 정부에서 아이들을 위해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것을 기대한다.

II.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의 원칙에 대한 제안

1. 교육부에 추진단을 둔다.

유보통합추진단은 교육부에 둔다. 박근혜 정부는 국무조정실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한 결과, 합의 도출보다는 부처 간 갈등이 생기거나 더 고조되는 병폐로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번 정부는 교육부에 추진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교육부로의 통합은 돌봄에 기반한 양질의 교육 받을 유아의 권리를 위해서 필요하며, 이는 세계 선진국들의 추진 방향이기도 하다. 부총리급 부처인 교육부가 범부처간 협력을 이끌어내어 유보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최근, 본 발제자는 유아교육학과 유치원 교사연합회 등 22개 단체의 의장으로서 유아교육계 모두는 교육부에 추진단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보육계의 대표성 있는 교수 및 학회장들과 면담한 결과, 보육계도 교육부로 통합해야 하며 교육부에 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오늘의 토론자들은 유아교육과 보육 학계와 현장의 대표성 있는 단체장 및 부모대표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오늘의 이 토론회에서 유아교육·보육의 대표성 있는 토론자들이 과연 어느 부처에서 추진단을 구성해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도출될 것이라 본다. 또한 부모들에 대한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교육부로 통합이 될 것을 대체로 희망하고 있다(박창현, 2022). 발제자는 교육부에서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합일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든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교육부에 추진단을 두는 것으로 확정할 것을 제안한다.

2. 즉시 구성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즉시 구성한다. 역대 정권들에서 유보통합관련 정책이 성공한 경우는 모두 정권 초기에 추진하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누리과정으로의 통합, 노무현 정부의 유아교육법 제정, 박근혜 정부의 유보통합 단계별 추진 중 1, 2단계의 일부분 추진 성과도 그랬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삼았으면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결정과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 장관이 공석이라는 점이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적 요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추진단 구성을 미루는 것은 정부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며 영유아를 위한 일을 계속 미룰 명분이 없다고 본다.

3. 단일기구로 구성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단일 기구로 구성한다. 박근혜 정부의 유보통합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통합모델개발팀의 3체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통합모델 개발팀은 이제 불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와 국책연구소, 그리고 이전 정부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에서 이미 충분히 모델 개발이 이루어져 있다. 이제는 조정과 합의, 그리고 실천만 남은 단계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실무조정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었다. 추진위원회는 정부관계자 외에 학계 대표, 언론, 소비자 단체, 부모로 구성하고 실무조정위원회는 정부관계자 외에 학계와 현장 교사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이중구조의 장점은 조정의 결과를 최종 결정 단계에서 수정할 여지를 둘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발제자는 이러한 이중구조는 투명하고 신뢰로운 통합과정을 위해 불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언론사와 소비자단체가 실무조정 상의판단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으며 그 정당성과 합리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부모의 경우는 영유아의 대변인으로서, 그리고 저출산 문제해결의 중요한 당사자로서 실무조정 및 합의과정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언론과 소비자 단체는 대국민 홍보 역할을 위해 필요시에 협력진으로 구성하면 되리라 본다.

발제자는 대국민 홍보와 의견수렴을 위해 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을 추진단을 지원하는 협력진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4. 3주체로 구성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아교육·보육자, 정부부처담당자, 부모의 3 주체자로 구성한다.

- 1) 정부부처 담당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다.
- 2) 유아교육과 보육자는 학계대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및 기관장 대표, 국책연구원 등으로 구성한다.

- 3) 교사 및 기관장 대표는 국공립과 사립(민간) 등 설립주체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 4) 유아교육·보육 대표는 객관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단체장으로 구성한다.
- 5) 교육과 보육 구성원은 전체적인 구도에서 가능한 한 동수로 한다. 단, 학계의 경우는 반드시 유아교육·보육으로 양분할 수 없는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 6) 부모는 전국 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부모단체장으로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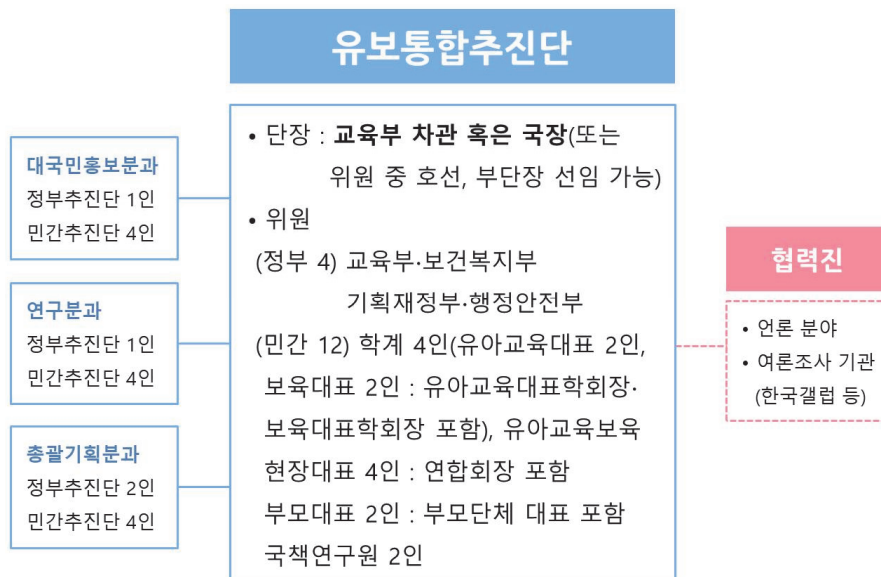
5. 유보통합추진단의 조정과 합의 역할수행에 적합하도록 구성한다.

이번 유보통합추진단은 이미 나와 있는 통합안을 위해 조정과 합의안 도출을 하는 역할이 초점이라는 시각에서 추진단을 선정하고 구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역할을 할 구성원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 1) '先 부처 통합'을 전제로 역할을 해야 한다.
- 2) 새로운 모델 개발이나 주장이 아닌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 3)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어도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합의안 도출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그리고 대국민 동의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Ⅲ. 유보통합 추진단 구성 모델 제안

앞에서 제시한 5개의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원칙들을 반영하여, 발제자는 다음 [그림 4]와 같은 구성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4] 유보통합추진단 구성도(안)

끝으로, 국정과제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보통합 추진단의 구성 뿐만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에 유아교육전공자를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직 속기구로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전폭적 지지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2013) 수요자중심의 유보통합추진밝혀.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3.5.22
- 문미옥(2006) 유아교육연구쟁점연구:한국미래를 위한 유아관련 학제 개편방향.유아교육연구, 제 26권 제 5호, 5-33)
- 박창현(2022) 국민관점에서 바라본 유보통합. 국정과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유아 교육대표자연대 토론회자료집. 2022.8.22., 신현영의원실
- 장명림(2022) 유아교육·보육통합의 방향과 쟁점논의. 유보통합정책포럼 제 4차 유보통합 쟁점토론회 자료집, 2022.5.26
- 한국유아교육학회(2005) 한국유아교육과 보육의 자리매김. 2005.10.8. 추계학술대회자료집.
-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2022), 국정과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2022.8.22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신현영의원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정효정 |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

1. 20대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의 당위성 천명

-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현 정부는 110개 국정과제 발표(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과제 46)
 -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과제 84)
 - 1) 임신·출산에서부터 아동의 돌봄·건강한 성장 지원
 - 2)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
 - 3) 소외계층 없는 맞춤형교육, 평생학습지원으로 교육격차해소 등 유·보육의 국가책임강화
 - 4)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있는 유아교육 체제의 통합
 - : 유아교·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
 - :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고 균등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 2001년부터 OECD에서도 유보통합을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생의 첫 출발의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보육과 유아교육의 관련법이 중복, 교육과정은 일원화되었으나 소관 부처 및 행·재정체계 규정 등의 차이로 기관 업무수행의 비효율성과 비형평성 문제, 부모의 이용 편의성과 기관 선택권을 보장 등을 핵심 의제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됨

2. 유보통합 추진에 전제되어야 할 가치와 지향점

- ‘영유아의 권리와 이익에 우선해야 한다’는 가치와 사회적 함의를 통합 정책목표로 설정
-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취지 상기
- 유·보육의 다양한 아동정책은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비용경감, 노동력 확보, 저출산 정책 노동정책, 여성정책, 인구정책에 치우쳐 왔음
- ‘아이가 행복한 사회’보다 ‘아이 기르기 좋은 사회’를 위한 정책에 편중
 - 아이가 아닌 ‘어른을 위한, 부모의 필요에 의한, 부모를 위한’ 사회 인식 고착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은 양질의 교육과 전문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담보

- 영유아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관의 인적·물적환경의 효율적 질 관리
- 어린이집과 유치원 당사자의 이해관계나 행정편의주의에 매몰된 통합, 부모편의증심에 치우치거나 여론몰이식 유보통합 추진은 단호히 경계
- 영유아의 행복 조건에 위배될 수 있는 정책 시행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함
- 취학 전 영유아기 교육체제의 전반적인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지는 분기점이 되어야 함
- 소관 부처 일원화, 재정·지원 통합이 유·보육의 질적 향상으로 연동되어야 함
 - 행정적·정책적 수반 등 유·보육환경 인프라 구축 시급

3. 유보통합 추진단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0~만 5세를 위한 국가 수준의 비전과 로드맵 발표
 - 유·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변화
 - 유아교육 체제의 개혁 안에 대한 로드맵 제시
 - 사회 각계각층과 이해 당사자의 동의와 참여 유도
- 박근혜 정부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3단계 계획 안(2014~2016) 참고
 - 만3~5세 교육과정 통합, 정보공시 통합, 비용 결재 카드 통합, 통합 평가지표 통합 등 부분적 통합 실현되었음
- 유·보육의 관리 부처와 행정체계 일원화
 - 25년여 동안 지속해온 통합 논의에 가장 큰 난제이며 선결해야 할 과제임
 - 중앙 및 지방의 담당 부서의 유·보육 행·재정 전달체계, 인력 기반 확립
- 재원 조달 및 지원 통합
 - 현행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유아 1인당 누리과정 보육료 동일 지원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 금액 차이(급·간식비/학급운영비/교사 수당 등)로 운영 건전성 저해 및 유·보육의 질 격차 유발
- 유·보육 관련 법적 체제 정비
 - 유보통합을 위한 정책수립 방향과 목표(장/단기)만 확립되면 법적 통합은 순차적
 - 행정 집행을 전제하지 않는 법체제는 의미가 없음
 - 법 체제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며 전술
- 교사 자격기준 및 양성체계 통합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간 갈등과 충돌 요인이 되고 있음
 - 보육교사 양성체계 변화와 법적 자격기준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함
 - 1) 보육교사 자격기준과 양성 과정을 유치원교사 취득과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필요 (3,4년제 대학 전공이수 교사와 개방형 자격취득 교사의 자격 수준 차등화 등)
 - 2) 보건복지부의 학과제 도입(2023~24년 예정) 시급, 자격기준 논란 요인 제거 필요

- 학과제 도입이 지연될 상황이면 통합 후 소관 부처에서 가칭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기준’을 제도화하는 방안
- 통합 현직교사 보수교육 실행 안(유치원교사는 복지과목/보육교사는 교직과목 이수)
 - 1) 양 기관의 역할과 기능 구분은 모호함
 - 2) 어린이집은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 적용으로 교육기능을 강화, 유치원은 전문적돌봄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통합의 실마리는 충분함
-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의 종합적이고 전문화된 관리를 위해 교육과 전문적 돌봄의 유보통합은 세계적인 추세임
- 유·보육 일원화 소관부서는 유보통합 관계자 간의 지속적인 협의로 합의 도출
 - 유·보육 관장 여부는 통합을 담당하고자 하는 부처의 의지 표명이 관건일 수 있음
 - 여러 연구 및 전문가 및 관계자 포럼에서 교육부 관장 의견이 지배적임
 - ECEC 대한 책임 소재도 대체로 교육부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
 - 현행 만3~5세 보육재정도 교육부가 관장하는 지방교육재정시스템으로 통합된다, 향후 행정 업무 통합이 더 용이할 수 있음
- 다른나라의 Care의 개념과 한국 보육시스템의 차이를 감안, 한국형 유보통합모델 필요
 - 교육복지적 관점의 포괄적 지원체계
 - 수요자 욕구에 부합한 다양한 보육유형의 수용 방안
- 성공적인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절차의 공정성 확보
 - 수요자의 욕구 수렴, 이해 관계자의 설득과 합의 도출
 - 60여 년 넘게 지속해온 상이한 입장 차이에서 발생하는 쟁점과 한계점 주지
 - 양 기관은 설립목적에 근거해 사회·국가책무인 양육지원을 수행해왔음을 존중
- 영유아중심·영유아권리존중에 우선한 안전한 보호,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양 기관의 중요성을 지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기대함
 - 기관의 환경 개선은 곧 양질의 교육과 전문적돌봄시스템을 전인할 수 있음
- 유보통합 당사자 간 추진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로 소통과 협력 및 상호양보 유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

정정희 |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새 정부가 시작되고 국정과제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다양한 포럼과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나 오늘의 토론회는 구체적 실행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단 구성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본다. 특히,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 유보통합 추진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2013년부터 유보통합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가 출범되고 통합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4년 국무조정실 산하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이 구성되어 유보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추진하였다. 1단계는 즉시 추진 가능한 것을 추진하고 2단계 본격추진과 3단계 통합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나 1~2단계 과제 정착 미흡과 누리과정 재원 논란 등을 이유로 추진이 지연되었다. 3단계의 관리부처 통합은 중앙부처 및 지방조직 통합, 그리고 재원까지 포함하여 2016년까지 완전통합을 하는 것이나 이행되지 못하였다. 2016년 이후에는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해소’를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현 정부는 ‘만 0~5세 유아교육·보육 국가책임제를 통해 출생 이후 영유아 단계의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보장’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기로 하고, 국정과제 46번과 84번에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 추진단을 설치·운영 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현 시점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기후와 환경문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 등 전환기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예측 불허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시기이다. 미래지향적인 교육체제로의 개편을 위해서는 영유아기 부터 출발하는 장기적 차원에서의 국가인적자원양성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원화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통해 영유아기 교육 분야의 공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러 정권에 걸쳐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던 유보통합에 대해 이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합의 세부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여주고 있다. 범정부차원에서 하루빨리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하고 유보통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본격적인 통합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유보통합은 교육의 출발선 평등과 유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유아교육·보육 학계와 현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여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 유보통합 추진단의 역할과 추진 방향

1)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방향 설정: 영유아중심의 통합

-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근본적인 목적은 모든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여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임.
-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영유아의 발달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도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임.
- 그동안의 유보 통합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영유아보다는 부모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영유아를 중심에 둔 통합정책 추진이 요구됨.

2) 유보통합 시 관리부처는 교육부로

- 관리부처 이원화는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수립과 실행을 위한 효율성, 형평성, 일관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운영의 투명성, 책무성을 높이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부처일원화를 통한 일관된 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함.
- 이미 유보 통합을 완성한 OECD 국가들의 경우, 각 국가별 상황과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교육과 보육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의 관리체제 하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육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교육부를 통합부처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 또한 학교체제를 갖춘 보편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그 속에서 다른 교육기관과의 연계성을 가지며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부로 행정부처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 유아교육기관은 인생의 첫 번째 교육의 장으로서 단순히 보호나 돌봄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경험과 학습이 일어나는 ‘학교’(school)의 개념으로 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그 방향에서 통합을 추진해야 함.
-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은 학교체제를 갖춘 보편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가운데 초중등 교육과의 연계성을 가지며 발전해 가는 것이 필요함

3) 유보통합 추진단 구성시부터 단일부처로

- 해외사례를 볼 때,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도 단일부처가 유보통합 추진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경우 효과적으로 추진됨.
- 이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행정적 효율성, 서비스 접근성과 형평성, 질과 지속성 제고를 위한 목표설정 후 관리부처 통합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임.
- 먼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담당 부처를 정한 뒤,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하고 통합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을 완성하는 것이 필요함.
-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되어 오던 모든 요소들(교사자격기준, 유치원,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대해 일원화하는 절차를 진행 하도록 함
-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담당부처가 정해지면서 지방에서도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행정조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

4)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보육 법체계 통합

- 현재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운영됨
- 「유아교육법」은 국가인적자원관리체제의 기본을 유아기 단계서부터 출발하도록 하며, 유아교육에서부터 공교육체제를 구축하여 조화롭고 균형 있는 발달조장과 보호자의 사회 경제활동 지원을 강조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보호자 경제 사회활동지원을 통해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 목적을 강조함, 영유아 이익 최우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
- 유보통합 추진 시 유아교육과 보육 법체계 정비와 통합이 필요함
- 법령정비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본 이념 및 철학,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관유형 및 법적 성격, 교사양성 및 자격기준, 지도 및 감독주체의 차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유보통합의 지향점과 방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된 후, 법령의 각 쟁점 요소별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6)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마련

-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비 및 보육료 산정체계가 다르고, 재원 및 재원부담의 주체도 유아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한 교육비 특별회계, 보육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유보통합을 추진하게 되면 추진과정과 통합 이후 관리부처를 정하게 되고 교사양성과정과 자격체계,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기준, 이용시간 등과 같은 요소들의 통합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파악하고 재원확보가 필요하게 됨

- 유보통합 추진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재정규모를 파악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보통합을 위한 특별회계 도입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재정여건에 따른 효율적인 통합 방안모색과 전략수립이 필요함

7) 우리나라 특성에 부합하는 유보통합 모델 및 추진체계 구축

- 해외의 유보통합 사례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각 국가들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맥락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원화된 체제 속에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는 각각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공공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유보 통합 추진 시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 유보통합을 이룬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한 후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 및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이전 유보통합 추진과정과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활동을 통해 유보통합을 위한 3단계 추진방안이 수립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제시되었으나 유보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경험을 거울삼아 새로운 시대의 특성을 반영한 유보통합 모델을 구축해야 함

[참고문헌]

고영미, 임수진, 박수경, 서윤희, 이소현(2022). 미래지향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정책방향. 사단법인 한국유아교육학회 이슈페이퍼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2013), 유보통합 추진방안(안).

문무경, 최윤경(2011). OECD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방안 연구. 육아정책 연구소 연구보고서 이덕난(2022). 제 1차 KICCE 유아교육·보육 통합 특별포럼: 새 정부 유아교육 보육 통합의 쟁점과 과제(1). 유아교육 보육의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및 법령정비 방안 토론회. 93-96.

이정옥(2013).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도전과 과제.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발표 논문집, 19-31.

정정희(2022). 유아교육·보육 통합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한국교육학회 뉴스레터.

정정희(2022). 제 1차 KICCE 유아교육·보육통합 특별포럼. 육아정책연구소 자료집, 41-42.

지성애, 홍혜경, 이정옥, 장명립(2015). 유아교육·보육 통합 모델 구축. 한국유아교육학회 2015년 추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 최은영(2022). 새정부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쟁점: 제 1차 KICCE 유아교육 보육 통합 특별포럼 자료집, 3-26.
- 최윤경, 박창현, 하연섭, 김희수(2016). 유보통합 정착을 위한 실행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유보통합 정책을 바라보는 현장의 제안

이경미 |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저는 유보통합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가 먼저 전제를 두어야 할 2가지 부분을 짚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정책 수립 후 영유아 공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발전을 위한 적정하고 충분한 예산을 지속하여 투자할 의지와 그에 따른 예산 마련 방안이 가능한가?

둘째,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적 관점에서 영·유아기부터 초·중·고 대학교까지 통일되고 체계적인 교육 체제를 마련해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입니다.

두 가지의 전제 없이 논의되는 유보통합은 추진력 없이 혼란만 가중하는 허장성세(虛張聲勢)의 정책이 될 것이기에 한번 더 강조하며 유보통합에 대한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의 일반적인 입장은 현 체제에서 교육과 보육기관 운영에 큰 문제가 없고, 나름대로 안정된 학교로서의 유치원과 보육 기관인 어린이집을 통합하겠다는 것은 0~5세까지 담당 연령의 전문성 문제, 돌봄의 확대를 통해 그동안 1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 일궈온 유아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하락 문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자격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매우 큰 우려를 하는 상황입니다. 같은 공·사립 유치원 간에도 매우 큰 편차가 있으므로 앞으로 유아학교로 공·사립학교 체제를 정립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국·공립유치원의 인력은, 교원은 교육부에서, 행정직과 공무원직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관할하므로 자체 필요 인력 수급이나 채용의 어려움이 매우 크고, 각 시도별 시스템 간에도 차이가 있어 내부적으로 방학 중 운영이나 버스 운영 등 수요자인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기 매우 어려운 시스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도 한 학급으로 이루어진 병설유치원부터 25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까지 차이가 있고, 어린이집과의 통합보다는 돌봄 지원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고 초·중고와 같이 의무교육으로 나아가도록 하자는 의견이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공립유치원의 현실에 기초하여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우리 연합회는 조건 부적인 유보통합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보통합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는 교육적 관점에서 통합을 전제로 한 교육부로의 통합이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 논의된 유보통합 관련 다양한 토론회에서 보육계와 유아교육 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임을 확인한 바 있기에 큰 이견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기존 2013년에 정부 차원에서 유보통합에 관해 정리한 바와 같이 보육과 교육기관의 다양한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각 기관의 전문성과 질 향상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와 이를 통한 기관의 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구합니다. 이는 '교육 격차 해소 및 평등한 출발선 보장으로 영유아의 학습권과 발달권을 보장'해 준다고 정부에서 밝힌 유보통합의 취지 실현과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보육교사 자격과 유치원 교사 자격을 재교육으로 통합하지 않고, 앞으로 운영되는 양성과정에서부터 일원화된 영·유아 교사 자격체계를 마련하여, 양성 기간이나 처우를 초·중등교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유보통합의 가장 큰 논점은 영유아들의 행복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에 기반하고 있기에 교사들의 전문성과 그에 맞는 처우 개선은 가장 우선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격체계 정비 과정에서 영아와 유아의 발달이 현저히 다르므로 영아교육과 유아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학계의 의견을 좀 더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내세운 세 가지 조건은 교육부 중심의 통합을 통해 영아기부터 유·초·중·고등교육까지 이어지는 교육 체제를 제도화하고 행정 체계 일원화로 예산 활용의 유용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며,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가 무상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보통합은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되 성과를 위한 정책으로 조금씩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을 먼저 구성하고 추진단에는 보육계와 공·사립 유아교육 전문가, 특히 현장의 전문가를 투입하여 서로의 입장과 문제를 하나하나 개선해 가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운영해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무조건한 통합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닌 유보통합의 한계를 분명히 직시하고, 정부가 구상하는 유보통합의 비전이 어디까지인지 국민 앞에 제시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상식과 공정의 원칙으로

이중규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유보통합이 포함되면서 모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발전적 미래를 기대하였으나, 정작 교육부 업무보고에는 만5세 조기취학 정책이 포함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였다. 결국 폐기의 수순을 밟게 됐지만, 이러한 정책 실행 과정에서 보육과 유아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학계, 일반 국민까지도 교육부에 대한 많은 실망감을 느끼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제 유보통합의 선두에 교육부가 서고자 한다면, 모두의 실망을 만회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더욱 체계적인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공정과 상식의 원칙으로 유지하며 유보통합의 중심에 영유아를 두고 통합을 논의한다면 발전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본 토론자는 유보통합추진단의 구성 과정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핵심 사안에 대해 어린이집의 입장에서 몇 가지 전하고자 한다.

첫째, 0~5세 영유아 모든 영유아가 균등하게 질 높은 보육·교육을 보장받아야 한다.

영유아가 어떤 기관을 선택할지라도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보육과 교육의 질 역시 상향평준화 되어야 한다.

유보통합의 목적은 ‘모든 영유아에게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중심에 ‘영유아’가 있다. 영유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면 그들을 둘러싼 양육자와 교사 모두 행복해 질 것이다.

둘째,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복지서비스로 도약해야 한다.

양육자들은 어느 기관에서든 개인의 양육상황에 맞는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기를 바라고 있고, 욕구에 맞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양육자의 권리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오랜 기간 분리되어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과 장점을 충분히 살리는 가운데 통합의 개념과 가치, 방향성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0~5세 재원아동수를 기준으로 유보통합추진단의 구성 비율도 맞춰야 한다.

2022년 4월 기준 어린이집 재원아동수는 1,006,955명이고, 유치원 재원아동수는 552,812명이다(출처-어린이집: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유치원: 교육통계서비스).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에 약 2배 정도의 영유아가 재원하고 있으며, 이는 유보통합에 포함되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더 많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대변해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본 토론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재원아동수를 기준으로 유보통합추진단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여 2:1 정도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관계자, 학계 및 학부모가 유보통합추진단에 더 많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린이집에는 영아와 유아가 모두 재원하기 때문에 최소 영아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위원 1인과 유아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1인으로 2인이 구성되어야 0~5세 영유아 모두를 위한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제언

“아이, 그의 이름은 오늘이다. 오늘이 부실하면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 4차 혁명으로 초고속 시대에 들어서면서 예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한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세상에서도,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점만은 변하지 않는다. 수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영유아들에게 영아기부터 교육이 필요하고 양육자의 안정적인 애착 속에서 자라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영유아 모두 평등하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필수 과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유보통합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다시 이루어짐에 감사하며, 본 토론회를 기점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유보통합의 방향을 잡아 나가길 바란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 유·보통합 추진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위성순 |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유보통합이 교육 분야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다시금 논의되고 있음에 대해 먼저 감사드린다. 그러나 유보통합을 통해 해당 연령의 유아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제공할지에 대한 큰 방향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추진단 구성 논의가 실효성 있을지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간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발전을 주도해온 단체장으로서 경험한 유보통합 논의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될 때마다 만 5세 초등학교 학제 편입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정책은 유아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공적인 삶에 대한 고민을 담아 논의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과 불안감만 안겨 주었다. 결국은 그런 제안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세월을 흘러보내며,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휘몰아치는 자리에 서서 성과없는 논의를 지켜보고 때론 참여하며 해묵은 논의를 지속하는 현실에 우리 유아교육자 뿐 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지쳐가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교육정책 담당자들이 유아교육 분야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위원회, 추진단, TF, 협의회 등 수없이 많은 이름으로 유보통합 논의를 진행해왔던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대부분이 공론화에 그친 논의들이었지만 2010년 이후 진행된 유보통합 논의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다.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으로부터 시작해 2013년에 만 4세와 만 3세 누리과정까지 2년에 걸쳐 통합과정을 만들어낸 사례가 있다. 당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수많은 전문가들과 교육현장의 영유아교육자들이 서로 다른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들여다보며 이견을 조정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협의하며 통합된 하나의 교육과정을 이루어낸 것이다. 당시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큰 그림을 그린 후 통합의 최우선 목표로 유아들이 동일한 양질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의지를 갖고 주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이루어낸 성과이다. 누리과정 제정 참여자 모두가 밤잠을 설쳐가며 통합과정을 만들고 당시의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2019년 전면 개정을 통해 유아·놀이 중심의 누리교육과정까지 지속·발전·보완·수정하여 질적인 교육과정 실행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통합의 결과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방향성 모색, 단계적인 통합 추진이라는 목표 설정, 무리한 추진보다는 전문가와 현장이 함께 고민하며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행정 부처의 노력과 비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우리들이 또다시 직면하고 있는 유보통합의 논의는 관련 정책 부처의 깊이 있는 고민이 빠져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 유보통합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현재보다 높아지지 않는다면 유보통합의 실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통합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유보통합의 결과로 유아들과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있어야만 통합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은 이미 통합되어 대한민국의 만 3~5세 유아라면 정부의 누리과정 무상교육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그럼에도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아들과 부모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불편함과 부담은 무엇인가?’, ‘그러한 불편과 부담이 유보통합 추진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등 단순한 부처 업무의 조정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궁극적인 지향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유보통합의 과정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발전했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의 내용체계가 통합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관할부처가 이원화된 상태에서 중복된 사업추진 등의 비효율성을 안고 유보통합을 단기간에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통합을 위한 통합이나 단순한 부처 업무 조정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유아와 부모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통합이라는 대원칙을 지킬 수 있는 통합으로 유아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통합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통합의 목표와 단계를 사전 설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과 수정·보완을 거쳐 이에 수반될 비용증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 필요한 인력에 대한 보수교육과 양성, 재배치 등에 대한 사전 전략 마련, 기타 사회적 합의를 위한 다양한 채널 확보 등이 가능한 추진단 구성이 뒤따라야 투자대비 성공적이고 실질적인 통합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한번의 성공적인 통합을 기대한다.

유보통합, 이번에도 진전을 이뤄내려면

이재필 | 한국영유아교사협회 대표

유보통합은 이번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당위성에 대해 설득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갖기 어렵다. 유보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은 사안에 따라서는 성인들의 이해관계에서 합리적이어도, 아이들의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인들의 이해관계만을 담아 선뜻 반대를 말하기는 어렵다. 유보통합은 반대의견을 내기에 쉽지 않은 문제이다.

성인의 관점에서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은 당위성을 인정받아 1997년 김영삼 정부의 <유아교육개혁특별추진위원회>구성을 시작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발전과 무산이 반복되었다. 그 중에서 만 3-5세 유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느 기관을 이용하는지에 관계없이 같은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일부 통합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유보통합에 있어 큰 산을 넘은 것이다.

<교육과정통합>이라는 큰 산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은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인 난제로 남아있다. 유보통합에 대한 어려움을 논할 때면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증 통합과 처우격차해소, 그리고 양성과정의 통합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유보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자격증과 처우통일> 방안을 검토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이후 약 9년의 시간을 별다른 성과없이 흘러보낸 뒤, 아동들의 차별없는 교육을 위해 다시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자격증과 처우통일>문제로 유보통합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문제로 유보통합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중단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때문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자격증과 처우통일>문제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큰 장애로 인식되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자격증과 처우통일>해결을 위한 첫 번째는, 문제의 당사자인 교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분리해서 생각해야한다는 것이다. 교사 자격증 문제는 '양성

과정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이들과 이미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들을 분리해야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이 가능하다. 2013년 <유보통합위원회>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자격증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 것은 문제의 당사자이며 아이들의 교육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교사가 유보통합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사 자격증 통합 방향을 논의하면, 아이들의 차별없는 교육이 포함된 문제이기 때문에 위 사항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문제이다. 자격증을 가진 교사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 이외에 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이다. 물론, 현재 교사들의 자격증 통합 과정에서 특정 자격을 가진 이들이 과도한 손해 또는 이익을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어, 교사들의 합의가 우선 시 된다면, 이전에는 유보통합을 멈추게 했던 문제가 교사들의 합의로 인해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고, 다음 문제로의 이동이 가능할 것이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자격증과 처우통일>해결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처우 차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일 것이다.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경험한 교사들은 두 기관의 처우 격차해소에 있어, 유치원의 처우가 어린이집의 처우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전제에 의문을 표한다. 양성과정에 있어서 유치원 교사의 양성과정이 학력 편차를 줄이는 안정적인 환경이라는 점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양성과정은 어린이집이 유치원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유치원이 교사의 학력에 맞는 처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과 유치원이 어린이집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은 처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전제에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법에 명시되어 보호되는 유치원의 처우는 유치원 교사 전체가 아니라 공립유치원 교사를 말합니다. 공립유치원의 처우가 어린이집을 앞서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지만, 2021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는 48,805명으로, 이 중 약 70%의 유치원 교사가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과반 수 이상의 교사가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으로 구분되지 않고, 유치원 전체가 어린이집에 비해 처우가 좋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처우격차 해소는 유보통합의 어려움 중 하나로 꼽히는 이유는, 공립유치원의 처우가 유치원 전체의 처우로 둔갑되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처우 격차 해소를 유보통합의 어려움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해결이 더욱 어려운 것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처우에 격차가 있다는 전제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문제 해결과정에서 교사의 참여가 적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문제도 유보통합과정에서 당사자인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어야만 해결 가능하며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유보통합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히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자격증과 처우통일>문제의 해결은 교사가 참여하지 않은 채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본질적인 진짜 문제로의 접근을 막는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유보통합의 교사 참여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자격증과 처우통일> 장애물에 막혀 중단되었던 유보통합을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할 것이며, 유보통합의 대전제인 영유아들의 차별없는 교육을 넘어 지금보다 유익한 교육을 만드는 데에 꼭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교육부에서 지금 시작해야 한다

이혜연 | 장애영유아연대 사무총장

장애유아 유·보 이원화로 인한 특수교육 부재

지난달 8월 15일부터 제네바에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회의가 있었다. ‘대한민국 제2, 3차 국가 보고서에 대한 심의’에 제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시민사회(CRP) 보고서에는 유·보 이원화로 인한 장애유아의 심각한 교육권 박탈이 보고되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특수교육법으로 장애유아를 만3~5세부터 의무교육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모든 유아에게 공교육이 이루어진 건 아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교육부로 보냈다.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위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정책 조정 등을 수행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5년이 지난 2022년 지금까지 어린이집의 장애유아 교육권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으며 특히 유아 특수교사 미배치는 장애유아의 생애초기 교육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교육 배제의 연계적 문제로 장애유아 양육자는 자녀의 초등입학 과정에서 특수학급 배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다. 교육지원을 하지 않으니 교육부 통계에 없는 것이다. 양육자에게는 취학 준비를 위한 정보제공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아기 특수교육의 부재로 입학후 당사자는 초등교육과정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부모가 원하는 특수교육 정책 우선순위는 특수교사배치

연도	교육기관			보육기관		
	특수학급 영아 유치부	일반유치원 특수학급	계	장애전문 어린이집	장애통합 어린이집	계
2008	976	634	1,610	6,068	3,518	9,586
2012	863	1,138	1,970	5,994	3,656	9,559
2021	1,035	4,444	5,479	6,264	5,578	11,842

연도별 특수교육통계를 보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만들어진 2007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유치원보다 장애아 전문이나 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약 2배 이상 많으며 매년 국가의 전체 출생율이 감소함에도 장애아 출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에서는 특수유치원보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기관수가 많았으며 지역별 상이한 교육환경과 지원에 대한 부모들의 의견을 듣고자 2019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장애유아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중 부모가 원하는 특수교육 정책 우선순위로 1순위는 특수교사 인력확충(25.6%), 기관확충(19.0%), 보육교육비 추가지원(17.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등) ① 법 제3조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학급급식비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는 제도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시설, 특수교사 및 치료사 등 전문인력 배치, 교사 처우, 장애 유아 1인당 교육비·교재 교구비 및 급식비 지원금, 통학 지원차량 등 특수교육 관련한 서비스는 전혀받지 못하는 현실에 부모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장애유아 더이상 미루지 말고 교육부 주도하의 통합을 우선

현재 교육부와 복지부의 통합체제가 여기저기서 논의되는 상황이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행정체계, 재정, 서비스 기능, 교사 자격,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고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으로 접근하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예측할 수 없다.

장애유아에게 유아기의 조기개입과 교육지원은 누구보다 생존과 연결되는 골든타임이다. 이미 교육지원 대상으로 명확한 장애유아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교육부 주도하의 통합을 우선한 후 지원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당사자 교육지원을 위해 유아대 교사수 조정, 특수교사 처우개선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충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청 관할의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특수교사를 배치하면 취학준비 아동으로 통계가 집계되고 초등교사배치와 특수학급 설치확대의 근거도 된다. 또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등) 3항에 따른 지원범위와 예산시행을 위해 교육청, 시도청, 학부모, 학계, 교사등 민관이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장애유아교육의 세부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제안한다.

영유아 최선의 이익을 위한 유보통합을 원한다

최현주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영유아포럼 부대표

영유아 시기는 생애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신체, 정서, 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통해 앞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영역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욱 풍족하고, 질 높은 환경과 보육·교육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영유아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보육·교육 환경은 우리 아이들의 생애 초기 교육권과 발달권을 저해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만0-5세 영유아들이 다닐 수 있는 기관은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만0-2세는 어린이집만 다닐 수 있지만, 만3-5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의 선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노동형태나 사는 지역·지자체에 따라서도 선택 가능한 기관이 달라집니다. 또 어떤 기관에 다니느냐에 따라 급식, 교사의 노동환경, 재정지원, 놀이 환경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유아라면 부모의 배경이나 다니는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모두가 안정적이고 풍족한 환경에서 보육·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교육부 주도의 유보통합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집단, 지자체, 교육청, 정부 부처간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충분히 고려되고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유보통합이 결국 무엇을 위해 논의되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 이것을 하는 것인지 그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이해관계 집단의 입장보다도 오로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어떤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어떤 기관에 다녀도 차별 없이 행복한 영유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유보통합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이기도 하며, 또 현재 국정과제에도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만5세 초등취학 사태로 인해 지금과 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시기는 없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언제 또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에 ‘영유아 최선의 이익’ 위한 유보통합 추진에 필요한 다음의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1. 부처는 ‘교육부’ 한 곳으로 명확하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십시오.

유보통합을 책임질 부처를 분명하게, 한 곳으로 정해야 합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교육복지라는 관점에서 영유아들의 주체적인 교육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OECD 또한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을 강조하며 교육부로의 통합을 권고합니다. 이에 영유아들을 위해, 교육부로 일원화된 유보통합을 요구합니다. 교육부가 추진 주체가 되어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영아기부터 시작되는 질 높은 교육적 개입은 유아기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길게는 학력 격차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영유아의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 주체의 유보통합을 추진하여 교육과 보육, 돌봄이 통합된 영유아 교육 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2. 당사자와 끊임없이 소통해 주십시오.

저는 6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양육자이기도 합니다. 유보통합 이슈에 대해 주변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이에 대한 기대와 바람의 목소리도 있지만 반면 정확한 사실을 잘 모르는 양육자들도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경험한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들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다고? 그러면 0-2세 아이들도 유치원에 가는건가? 너무 어린 나이부터 유치원에 가면 바로 뭘 배우게 되는건가? 아직 뭘 배우기에는 너무 어린데? 또 원래 어린이집 선생님들(영아반 교사)들이 5-7세 아이들 교육을 하게 되는거야? 그건 교사 질이 떨어지는거 아니야?”

이번 만5세 초등취학 사태에서도 경험했듯이 어떠한 정책이든 정책의 당사자, 주체의 공감과 동의 없이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유보통합 또한 그럴 것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정책의 당사자, 대상인 부모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과,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 양육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은 우리 영유아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기본전제가 되어야 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부정확한 정보로 불안해하는 양육자들에게 정확히 사실 중심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또한 그 어떤 특정 집단을 위해서도 아닌 오로지 우리 아이들, 영유아 최선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 양육자들에게 전달된다면 부모들 또한 이를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정치가, 행정가들은 저출생이 심각하다며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활동가로서, 또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로서 ‘일단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라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게 해주면 안될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합니

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세상에서는 어른들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갈래로 나뉜 영유아의 교육·보육 환경이 이제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아이들 ‘영유아’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재편되어, 아이들이 지금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